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중소 · 벤처기업 현장어로 혁파방안

2017. 9. 2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중소기업 규제혁파 체감현황

II 새정부 규제혁파 추진방향

III 주요 현장어로 개선과제

1. 진입장벽 해소
2. 기업활동 애로 해소
3. 기술기준 합리화
4.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I 중소기업·벤처기업 규제혁파 체감현황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혁파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혁파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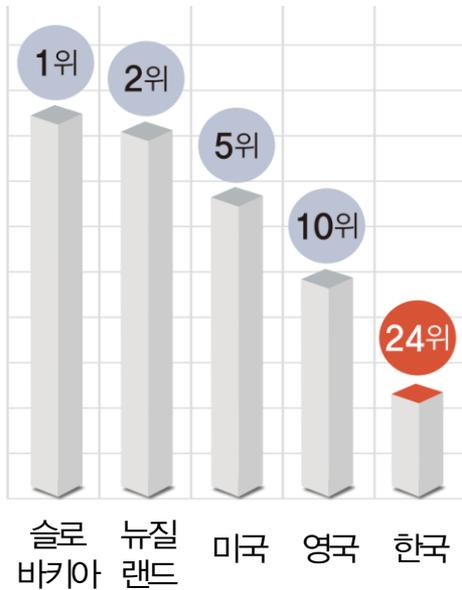
- 중소기업 대부분이 규제혁파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라고 인식, 59%가 규제혁파를 체감하지 못함('15. 2, 중기중앙회)
-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과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고, 규제로 인해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과 애로를 호소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정도('16. 12, 중기중앙회) : 준비를 못하고 있다 94%
 - 신산업 글로벌 경쟁 걸림돌('17. 6, 대한상의) : 규제 75%, 판로 73%, 자금 72%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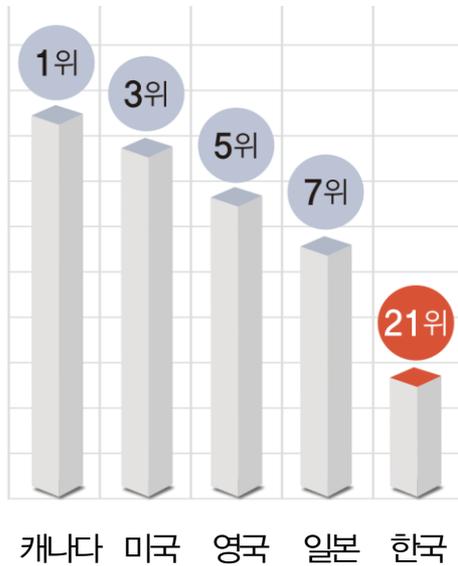
주요국 대비 규제 수준이 높아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에 한계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 규제는
심각한 상황 ('14.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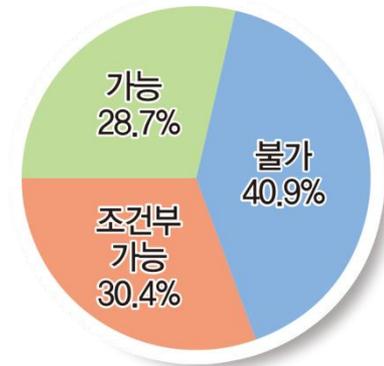
〈기업활동 규제〉



〈법인기업 행정부담〉



전세계 투자유치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70%가 국내에서는
불법('17.7 아산나눔재단)



우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촉

에어비앤비 | 숙박업 요건 미충족

Ⅱ 새정부 규제혁파 추진방향

◎ (새정부)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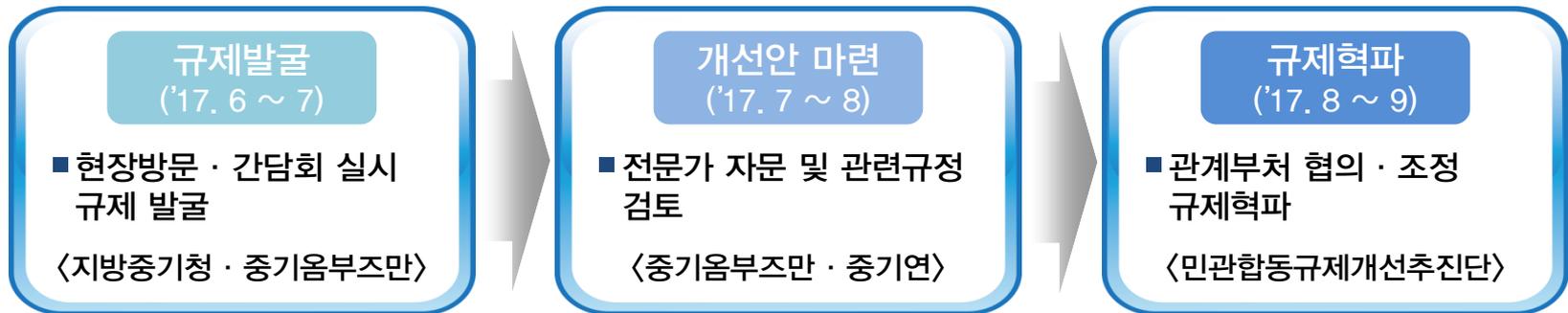
- 신산업 · 신기술 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
-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 민생 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 (중소 · 벤처기업)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 을
금년 10월에 발표

- 벤처확인제도 개편 등 정부 역할 재정립
- 투자 · 회수 선순환 생태계 조성
- 기술 · 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
- 원활한 재도전 환경구축

규제혁파의 주안점

이년에는 새정부 출범 후 기업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과제 중점 발굴 · 혁파



향후 12개 지방중기청에 ‘규제신고센터’ 를 설치, 상시 규제발굴 · 혁파

- 중기음부즈만, 각 지역별 TP · 창조혁신센터 등과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
- 건의 받은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해결 ➔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에서 발표

Ⅲ 주요 현장애로 개선과제

1. 진입장벽 해소
2. 기업활동 애로 해소
3. 기술기준 합리화
4.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1 진입장벽 해소

창투자
납입자본금
요건 완화

현행

창투자 설립시 납입자본금은
50억원 이상

개선

납입자본금 완화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17. 10)

➔ 소규모 창투자 설립 촉진으로 창업 · 벤처기업 투자확대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의
최소지분율
완화

현행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의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

개선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소지분율
차등적용(10~20% 이상)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7. 12)

➔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기업활동 애로 해소

무급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현행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나, 가족종사자는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개선

중소기업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허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18. 12)

➔ 중소기업 무급가족종사자(117만명)의 산재보험 가입으로 경제적부담 완화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기준
완화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은 최저
임금 110% 이상 또는 월 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

개선

가입요건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완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개정('18. 1)

➔ 특성화고 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성 제고
→ 소득증대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안전모의 통기구멍 허용

현행

낙하추락방지용 안전모에 통기구멍 불허용

개선

안전모에 통기구멍 허용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17. 12)

➔ 건설업체 근로자의 장시간 안전모 착용에 따른 피로도 완화

R&D사업, 현물 계상기준 개선

현행

R&D사업비 민간부담금 중 연구 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개선

현물 계상기준을 “장부가”에서 “구입가”로 개선
*R&D 사업 관리지침 개정('17. 12)

➔ R&D참여기업(5.5천개)의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 완화

3 기술기준 합리화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기준 합리화

현행

건설현장에서는 두께별로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관행

개선

단열재 두께와 관련없이 하나의 시험성적서만 제출

* 발주청, 시공자, 건설협회 등 업무개선('17. 10)

➔ 불필요한 중복시험 해소에 따른 시험비용 절감

주방용 세척제 제조시설 기준 합리화

현행

주방용 세척제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살균 소독제 생산시설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생산시설이 필요

개선

식품용 기구의 살균 소독제를 주방용 세척제로 제조할 경우 생산시설을 같이 사용 가능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 4)

➔ 살균소독제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주방용 세척제 시장 진출)

4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 행정조사*는 상당한 기업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간 실태 파악 및 정비 미흡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현장조사, 시료채취, 보고, 자료제출 요구 등(27개 부처, 595개 행정조사)

*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되 ‘행정조사기본법’ 준수

- 조사근거 :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
- 조사원칙 :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대상자 선정 · 실시, 유사 사안 공동조사 등
- 조사절차 : 조사 7일전 사전통지, 조사시 증표제시, 조사경과 서면통보 등

● 기업 행정부담('16. 2 대한상의, 100보다 높으면 부담으로 인식)

– 행정조사 139, 법인세 119, 진입규제 68 순

● 부담수준 : 업체별 연간 451페이지, 900여만원

➔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새정부 규제혁파 과제로 ‘행정조사 정비’ 추진

◎ 국조실과 중소기업연구원, 법제연구원 등 관련기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부처·조사별 정비계획을 마련('17. 11)

● 정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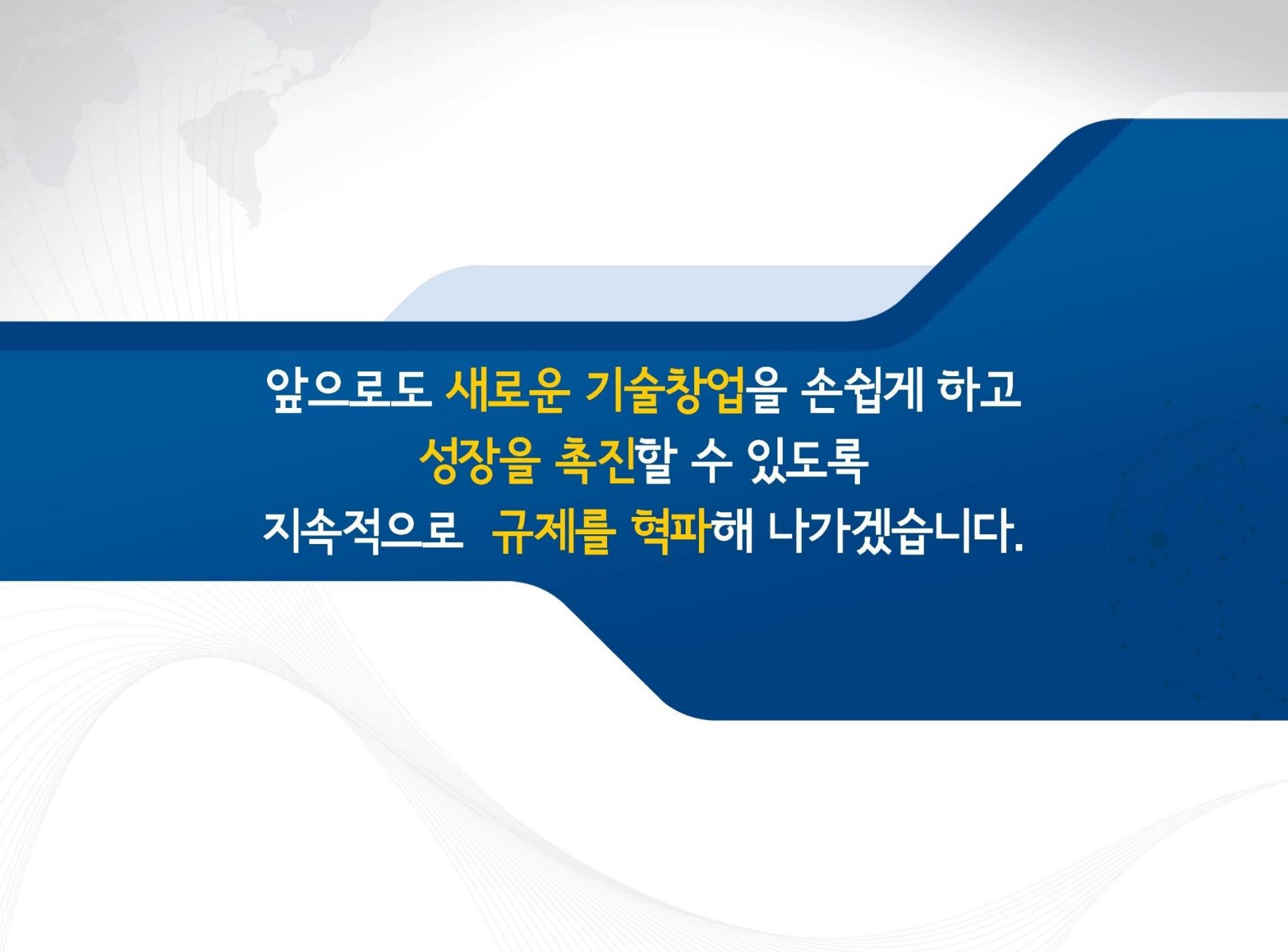
-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행정조사
- 조사 실적이 없는 행정조사
- 과도한 자료제출
- 부처내·부처간 유사한 행정조사
- 행정조사 법정 절차 미준수
-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사특례 부재



- 근거나 실적이 없는 조사폐지, 조사실시 주기 완화
- 조사내용 간소화·통합, 공동조사
- 요건 명확화, 절차 준수여부 점검
- 조사 차등화, 신설 심사 강화

● 정비효과

- 행정조사 종류·횟수 축소, 예측 가능성 제고, 조사대상자 권익 보호 등
-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영업 부담 완화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창업을 손쉽게 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습니다.